

현장과 시각

고민 깊어가는 J프로젝트



최희중

사회2부 차장

전남도가 지역 최대 현안인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개도시 개발계획)로 인해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최근 J프로젝트 개발 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심의가 두 차례나 무산됐기 때문이다. 중도위의 다음 심의가 1개월 가량 늦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전남도가 고민하는 것은 J프로젝트의 일정 지연이 아니다. 정부의 심의 보류가 단순히 행정절차상의 지연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J프로젝트 축소를 위한 사전 포석에 여겨지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발계획 승인신청 대상인 J프로젝트 3개 지구(삼호, 구상, 초소) 중 간척지인 초소지구와 관련, 농업수산식품부와 부지 양도양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J프로젝트 개발계획의 중도위 상정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정부가 J프로젝트 사업 범위 우선 3개 지구 중 초소지구를 제외한 시범사업지구인 삼호·구상지구(31km, 940만평)로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논조리를 보내고 있다. 이 같이 초소지구가 문제가 된 것은 농림부가 간척지 활용방안을 놓고 현지 여론 수렴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현재 전남도를 꾸러 J프로젝트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와 문화관광연구원의 수요예측보고서, 3개 특구특별법인(SPC)의 재무개발분석자료 등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2차 현지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때문에 지역 일각에서는 정부가 J프로젝트를 축소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의 경우 간척지의 농지비율을 71%에서 30%대로 줄여 개발면적을 당초 보다 배 이상 확장한 반면 J프로젝트는 오히려 간척지의 농지 기능을 강화하는 등 행정성이 많지 않다고 지적된다.

정부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J프로젝트를 축소하는 대신 새만금 개발사업에 치중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대목이다.

전남도는 J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의 각종 태클이 총 2천200만평(87.92km)에 달하는 개발 면적을 삼호·구상지구 940만평(31km)으로 줄이려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사업 타당성 의견에서 자본 투입 대 초소지구를 사업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당초 개발 계획안 관철에 전력하고 있다.

국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대형 사업인 J프로젝트 때문에 전남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chaek@kwangju.co.kr

# 北, 핵재처리시설 일주일내 재가동

## IAEA에 통보...봉인·감시장치 제거

북한은 일주일내에 영변 핵시설의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할 것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했다고 벨라시 플레밍 IAEA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또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IAEA 검토팀이 북한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에서 봉인과 카메라 장비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있다다는 위험을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되는 이번 조치로 IAEA는 앞으로 영변의 재처리시설 관련 상황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플레밍 대변인은 이날 이사회에서 최근 북한 상황을 브리핑한 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차장의 말을 인용, "북한이 일주일내에 재처리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검토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또 "오늘 영변 재처리 시설의 봉인 및 감시장비 제거가 완료됐다"면서 "북한은 IAEA 검토팀에 '앞으로 재처리 시설에 대해 더이상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IAEA 검토팀은 앞으로도 영변에서 원자로와 다른 핵관련 시설의 가동 중단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dpa통신은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 재처리시설에서 약 100개의 봉인과 25기의 감시카메라가 제거됐지만 사용용 연료봉은 아직 봉인 상태에 있다면서 이같은 핵물질의 봉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IAEA에 다시 제3회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북한 북핵 외무성 미국국 북국장장은 지난 2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남북실무협의에서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 문제와 관련,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복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자로를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개월이나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이 서방의 제재로 관련 핵심 장비나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어쩌면 노후화된 핵시설의 일부는 아예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한승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한국시간) 뉴욕 유엔사무총장 관저에서 열린 빈기문 사무총장 주최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시 "유엔, 北·이란 제재 이행해야" 유엔총회 연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3일 유엔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유엔안보장이사회가 통과시킨 핵프로그램 관련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들 국가의 핵 야욕에 국제사회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재임 중 마지막 될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40'과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핵무기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우리가 그들을 내버려 두기만 해도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테러사태에 대한 심판이 테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최상의 방안"이라며 테러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하지만 "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엔안보장이사회와 선진 8개국 그리고 이슬람회의기구(OIC) 사무총장까지 테러를 범죄로 선언했다고 지적하면서 "노예제와 약탈과 같은 테러는 세계에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계속 늦추고 있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이라고 직접 지칭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日 아소 다로 총리 취임

## 중의원 지명선거 총리 선출...새 내각 발족

일본의 아소 다로 자민당 총재가 24일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지명 선거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됐다.

아소 총재는 이로써 제92대 총리이자 59명째 총리로 취임, 이날 중 자신의 내각을 발족할 예정이다.

총리 지명선거는 중·참 양원에서 각각 실시됐으나 아소 자민당 총재가 헌법상 의결의 우선권을 갖는 중의원에서 총리로 지명됨에 따라 차기 총리로 취임했다.

아소 총리는 중의원 표결에서 전체 478표 가운데 과반수가 훨씬 넘는 337표를 얻어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 등을 제쳤다. 참의원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대표가 결선까지 가는 표대결에서 총리로 지명됐다.

그러나 중·참 양원의 결정이 다를 경우 거지도록 돼 있는 양원 협의회를 거쳐 중의원 우선 원칙에 의해 아소 총리의 취임이 확정됐다.

아소 총리는 곧바로 조각에 착수, 이날

저녁 왕실에서 정식 임명식과 인증식을 거쳐 내각을 구성 발족한다.

이에 앞서 후쿠다 아소 내각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의결했다. 지난해 9월 26일 취임한 후쿠다 총리는 재임 365일로 현행 헌법하 총리 가운데 7번째로 일찍 물러난 기록을 갖게 됐다.

차기 총선거를 겨냥해 급조되는 아소 내각에는 나가사키 히로부미 전 문부과학상이 외무상, 나카가와 쇼이치 전 정조회장이 재무수렴 겸 금융담당에 각각 내정됐다.

또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차녀인 오부치 유코 중의원이 소비자 담당상으로 내정돼 전후 최연소 입각 기록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소 총리와 겨뤘던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은 유임되고,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은 농림수산업에 내정됐다.

/연합뉴스

# 中 멜라민 분유 공포 전세계로 확산

## 8개국 수입 금지...원자바오 총리 "책임 통감" 사과

5만3천여명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중국산 멜라민 분유 공포가 아시아는 물론 미국,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23일 현재까지 중국산 유제품 수입을 금지한 나라는 최소 8개국으로, 피해 아동이 나타난 홍콩부터 심지어 아프리카 케냐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이 확대되고 있다.

요구르트, 과자, 사탕 역시 공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에 오염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케냐와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산 식량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콩 보건당국은 지난 20일과 22일 멜라민 함유된 중국산 분유를 먹은 3

살짜리 여자 어린이와 3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신장결석에 걸린 사실을 각각 확인했다.

싱가포르 정부 산하 농식품가축국은 중국산 요구르트와 딸기 우유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모든 중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판매, 수입을 즉시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식품 안전국은 멜라민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난 중국산 '흰토끼 크랜디'가 자국내 중국 식품점 등에서 팔리고 있는 사실을 확인, 뉴질랜드서 판매 중인 멜라민 제품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말라야 등 아시아 국가들도 부

룬디,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산 유제품들을 리콜하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제6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미국의 우호단체가 마련한 오찬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를 향해 사실상 사과했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미국의 우호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환영 오찬에 단언을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원 총리는 500여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소비자와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적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중국 정부의 책임자로서 매우 참담함을 느끼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경매 대증법률(주) T.082)223-6600 010-7668-6622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동구	유희동	128	15/11	190	1차권
	상동	133	11/13	190	1차권
	동문동	159	10/7	390	2차권
	동문동	154	7/7	190	2차권
	동문동	159	7/7	190	2차권
사구	동문동	165	12/13	190	1차권
	동문동	105	20/6	190	2차권
	동문동	60	14/8	190	2차권
	동문동	118	17/2	190	2차권
	동문동	131	15/2	190	1차권
남구	남문동	165	24/11	190	2차권
	남문동	99	15/8	190	2차권
	남문동	70	8/9	190	2차권
	남문동	86	11/8	190	2차권
	남문동	125	15/5	190	2차권
북구	북문동	128	18/2	190	1차권
	북문동	71	15/8	190	2차권
	북문동	77	5/7	190	2차권
	북문동	108	13/13	190	2차권
	북문동	112	17/13	190	2차권

법원경매 (주)옥션코리아 T.062)222-8446 010-3666-8446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동구	유희동	128	15/11	190	1차권
	상동	133	11/13	190	1차권
	동문동	159	10/7	390	2차권
	동문동	154	7/7	190	2차권
	동문동	159	7/7	190	2차권
사구	동문동	165	12/13	190	1차권
	동문동	105	20/6	190	2차권
	동문동	60	14/8	190	2차권
	동문동	118	17/2	190	2차권
	동문동	131	15/2	190	1차권
남구	남문동	165	24/11	190	2차권
	남문동	99	15/8	190	2차권
	남문동	70	8/9	190	2차권
	남문동	86	11/8	190	2차권
	남문동	125	15/5	190	2차권
북구	북문동	128	18/2	190	1차권
	북문동	71	15/8	190	2차권
	북문동	77	5/7	190	2차권
	북문동	108	13/13	190	2차권
	북문동	112	17/13	190	2차권